

국내 동정

전북도, 車부품·생물 등 4개분야
과기진흥사업으로 육성

전북도(도지사 강현욱)가 기계 및 자동차부품·생물·방사선융합기술(RFT)·신재생에너지 등 4대 분야를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도는 최근 전주컨벤션홀에서 전북과학기술자문관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중점 추진할 전북지역 과학기술진흥사업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도는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사업에 군산시 등과 함께 3년간 640억원을 투입해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와 인력양성, 핵심선도기술 개발 등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생물·생명공학산업 육성에 550억

원을 투입,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전북대 등과 산·학·연·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생물벤처 공동실험실과 시험생산공장 등을 건립하는 생물산업 집적단지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FT 산업분야에서는 내년 2월 개원예정인 정읍의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와 전북대 첨단방사선응용연구센터 등을 주축으로 향후 10년간 6960억원을 투입하는 RFT 밸리조성계획을 확정했다. 2007년까지는 새만금 풍력발전단지에 풍력 발전기 50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자신문, 2004.12.27-

원전센터 부지 분리 선정... 원자력위원회의 확정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부지 선정과 관련, 방사선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을 고준위 폐기물과 분리·저장하는 방침이 확정됐다.

정부는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원자력위원회를 열고 오는 2008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는 중·저준위 폐기물(작업복 폐필터 등) 관리 시설을 우선 건립키로 결정했다.

고준위 폐기물(사용후 연료) 관리시설은 아직 포화시점(2016년)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향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 추진 일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협의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신규 공모절차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원전센터 분리 방침은 방사선량이 중·저준위 폐기물의 1백만배에 달하는 고준위 폐기물의 위험성을 들어 그동안 원전센터 건립에 반기를 들어온 시민단체들의 반대 논리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원전센터 분리방침에 대해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부지선정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공모절차와 관련, “기존의 주민 자율신청이 최적의 방법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선(先)여론조사 후(後)주민투표”방식의 채택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방식은 정부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그동안 유치청원을 한 지방자치 단체를 지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진 영광 고리 월성 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4개 지역과 올해 주민 유치청원을 접수했던 것으로 인정된 울진 고창 군산 부안 등 15개 안팎의 지자체가 후보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 2004.12.1-

